



보도시점 2024. 10. 16.(수) 배포 시 배포 2024. 10. 16.(수)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준비상황 점검 완료

- 농식품부, 인니 할랄인증 의무화 이후에도 차질 없이 수출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출기업 준비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에 대비하고 수출기업별 준비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0월 15일(화)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점검회의(영상)를 개최하였다.

* 커피조제품, 김치, 장류, 라면, 식품첨가물, 음료, 소스류 등 8개 기업

*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실적(9월말 누적) : 190백만불(전년대비 3.3% 증가)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년 10월 17일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 및 음료에 대한 할랄인증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 국내 인증기관, 수출기업 등과 함께 긴밀히 협업해 왔다.

* 할랄인증 의무화가 시행되더라도 비할랄 표시 후 별도 매대에서 유통·판매가 가능

정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23.9월)하였고, 이를 통해 ’23.11월 국내 인증 2개 기관*이 인도네시아 인증기관(BPJPH)과의 상호인정협약(MRA) 체결을 이끌어 냈고, 올해 10월에도 2개 기관**이 추가로 체결하여,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가능하다.

* KMF(한국이슬람교), KHA(한국할랄인증원)

**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BIC(부산인도네시아센터)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장 초청 설명회(‘23.12월), 할랄인증청과 실무 회의(‘24.6월),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국장급 면담(‘24.7월) 등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소통을 해왔다.

또한, 식품기업들의 국내 할랄인증 취득을 독려하기 위해 수출기업 대상으로 관련 상담 및 설명회를 총 30여 회('23.5월~, 온라인 14,715명, 오프라인 1,438명) 진행하였으며, 수출기업당 최대 4천만원까지 할랄인증 취득 및 하람 성분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다.(사업비 총 60억원)

한편, '24년 8월말 기준 인도네시아에 수출 중인 품목 중 할랄인증이 필요한 가공식품의 수출액(정보제공동의업체 기준)은 112.6백만불이며, 이 중 할랄인증을 취득한 기업의 수출액은 107.2백만불로 95.2% 수준이다. 또한, 할랄인증 의무화가 시행되더라도 비할랄 표시 후 별도 매대에서 유통·판매가 가능하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10월 15일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와 관련하여 현지 동향 등을 공유하고, 기업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주요제품은 이미 할랄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무슬림 또는 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등은 당장 인증이 필요하지 않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이후 상황을 보며 인증취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할랄인증 관련 최신동향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비하여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 체결, 수출기업 할랄인증 취득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라며, “향후에도 對인도네시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이연숙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김남주 (044-201-2174)